

광주 중위소득 이하 26만 가구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광주·전남 긴급민생자금 대상·일정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

내달 1일부터 주민센터·홈피 신청

특수고용직 소득감소 입증자료 필요

전남도는 32만 가구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공요금·경영자금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번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고, 저소득 시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 26만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지원 대상은 크게 중위소득 이하 가구와 특수고용직, 실직·휴직자 생계비 등으로 나뉜다. 공통요건으로 신청자는 올 2월 3일 이후 광주시 주민등록자이고, 사업장은 광주시 소재, 가구당 최고 100만원이 한도다.

광주시는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가계 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8500여 가구 중 42%인 26만여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등으로 1회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한 뒤 해당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이 제외되는 가구는 중위소득 이상인 27만 가구와 중복수혜를 받게 되는 8만8000여 가구다. 중복수혜대상은 가구 구성원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된 생활지원비 대상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74만9174원이다. 1인 175만7194원, 2인 299만1980원, 3인 387만577원 등이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관련 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에서 처음 발생한 2월 3일 이후 본인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원과 문화센터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와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이다.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감소액, 월 최대 50만

원,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4월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된다. 실직·휴직자 생계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실직이나 휴직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등은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방식과 동일하다.

◇전남도 총액 1835억원 규모 민생지원, 조기집행=전남도의 코로나 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은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크게 3갈래로 집행된다.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약 32만 가구다. 정부생활지원 대상자는 제외되며, 도내 87만가구의 37%가 해당한다. 가구원에 따라 30만~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은 1280억원 규모로 도비 40%(512억원), 시군비 60%(768억원)로 조성된다. 관련 조례 개정, 추경안 확정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상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종사자 8만 5000명이다. 연매출 3억5000만원 이하, 고용인원 등 제한사항이 있다.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을 최대 30만원(10만원씩 3개월) 지원한다. 도비 40%, 시군비 60% 매칭해 255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경안 확정 후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4~5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올 1~3월 납부한 공공요금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금융 취약계층 등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이차인원 사업에 20억원을 투입, 2% 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규모는 1000억원으로 소상공인 650억원, 중소기업 350억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보증 및 수수료 면제 지원도 추진한다. 보증 규모는 2200억(정부 자금 1200억, 도 자금 1000억) 수준으로 수수료 면제를 위해 도비 17억6000만원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도 추진한다. 전남도 경영안정 자금 분할상환은 6개월 유예, 일시 상환은 만기 1년을 연장한다. 정부 및 은행 자금의 경우 최대 6개월 보증 연장을 검토 중이다.

도비 20억원을 들여 금융 취약계층 1000명에게 평균 200만원을 대출하는 소액 대출 사업도 진행한다. 도내 공설시장 87곳 임대료 감면사업, 민간 시설 임대료 인하 동향 캠페인(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현재 61명이 참여해 점포 381개소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전남도는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시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생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개혁 세력 대통합 주도해 호남 집권 시대 열겠다”

민생당 광주후보들 지지 호소

민생당 광주 지역 예비후보들이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주도해 호남 집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장병완(동남갑)·박주선(동남을)·전정배(서구을)·최경환(북구을)·김동철(광산갑) 예비후보와 김성환(동남을)·김명진(서구갑)·노승일(광산을) 예비후보 등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민생당과 민주당은 한 뿌리, 형제이다”며 “한때 대립과 갈등으로 반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연대와 협

력을 통한 이후까지 지속해 2년 후 대선에서 민주개혁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는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통해 다당제의 기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당제를 안착시키지 못한 채 사분오열돼 커다란 실망을 안겼다. 앞드려 사퇴드린다”며 “3당이 분열된 이후 한국 정치는 또다시 무한 대립과 정쟁의 악순환에 빠져들고야 말았다.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이어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역사적으로 3당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만으로는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의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진흥량 경선의 막강 추태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의 결정판이었다”며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물을 선택해달라. ‘물지 마’ 정당 투표가 아닌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3~5월 세비의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경선 원칙과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177개 총선 공약...공정사회·한반도 평화 방점

“광주·전남지역 공약 재탕”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공정사회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공약은 기존 현안 사업들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신규 조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관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

겠다고 했다. 남북관계에서는 남북경협 사업 재개, 남북 국회회담 추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상주대표부로 확대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와 국공유지 등에 주택 10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반값 등록금’이 대표 공약이다.

노인 복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립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질병을 ‘정’으로 승격하고 6개 권역에 질병 지역본부부를 설치한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기국회가 없는 달

에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지구 심사권을 폐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의원의 세비 삭감,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공약은 기존의 현안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미래를 위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공약은 AI 집적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 광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광주형 일자리 차질 없이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 연장 등에 그쳤다. 또 전남 공약은 한전공대 2022년 개원 및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차세대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등이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